

조국당 “조희대 탄핵 함께하자”… 더불어민주당 결단 압박

민주당, 원내 의견 수렴 후 결정
조국혁신당, 공동대응TF 제안
오늘 양당 원내대표 논의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여부가 국정감사 이후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원내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자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며 민주당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초반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자 조율이 안되자 관례를 깨고 후보자를 서명 제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정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시사하며 원내 의견 수렴을 통해 탄핵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로 했다.

김 대표의 발언 수위도 시간을 거치며 점차 높아졌다. 김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10월7일)’,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10월14일)’, ‘이미 탄핵의 티을(티)자에 대해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10월16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전날(1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20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하자고 민주·진보 정당들에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침해 ▲대법관 후보자 제정 의무 미이행으로 헌법 위반 ▲202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선

서 및 증언 거부로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배 등을 사유로 적시했다.

신장식 당 대표는 “민주진보 정당들에 제안한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자”며 “조국혁신당은 판사, 헌법재판연구원, 법제처장을 지낸, 바로 제 곁에서 계신 김형연 의원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한다”고 제안했다.

신 대표는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원내대표 간 협의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민

주당이 책임 있게 결단하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다. 왜 국민께서 민주당에 국회 과반인 161석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며 “김 씨가 풀려나 윤아게인 세력의 구심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 이전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 대법원장에 탄핵소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승원·용혜인 등 장관 후보자의 낙마, 증시·부동산 불안정, 국가직 소방관 관련 설화로 민주당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나섰다가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경쟁 구도를 벌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최민회·한민수·이성운 최고위원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도착증이 다시 도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딱 2개 밖에 없다.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갑질”이라고 표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민주당, 초광역특구법 ‘투 트랙’ 발의

노동특례 유무 법안 등 병합 심사
320개 규제특례, 40개 정책지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메가특구 내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특례가 도입된 이번 법안은 노동 특례 포함, 미포함 법안 등을 병합 심사에 최종안을 완성시킬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부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수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역점 사업인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 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했으나 초광역특구법으로 명칭을 바꿔 발의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시

이번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의 중심지가 될 초광역특구를 지정하고 첨단 기업의 지방 초광역특구 투자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은 320여 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40여 개 정책지원 패키지를 담아, 기업과 지방정부가 메뉴판처럼 법안 내 규제 특례를 선택하게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인프라, 정주여

건 개선, 인재 활용, 연구개발(R&D) 등 노동시간 특례, 전략산업별 특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법안에 포함된 근로소득 상위 3% 고소득 전문직 및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면제는 노동계의 반발이 있어, 노동특례가 포함되지 않은 안(최기상 민주당 의원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노사정의 특별법 내 노동특례 도입 여부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방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안전 예산·인력 확충 주문

강력범죄·재난 대응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소방과 경찰, 재해 예방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능을 전면 재점검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잇따른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라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민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국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와 교통사고, 자연재해뿐 아니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경제·사회적 고립에 따른 자살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는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자살자, 여름철 풍수해 사망자 등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 보강이 필요하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행히 대형 사고들이 없기는 한데, 혹여 또 모르기 때문에 군중 밀집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치안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경찰의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치안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與野, 해군 대비 태세·해병대 준4군 체제 놓고 이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20일 열린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군 대비 태세와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 경제 격차를 언급하며 우리 해군에 자신감을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해병대 조직 확대보다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유류 확보와 전쟁 지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 군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 정제유 공급 제한을 거론하며 “북한 전체에 대한 정제유 공급 제한이 1년간 50만 배럴”이라며 “우리나라가 하루 쓰는 정제유가 약 260만 배럴인데, 우리나라가 5시간 쓸 정도의 기름을 (북한은) 1년 동안 사용하라고 한 사상 유례가 없는 가혹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은 해군을 가동할 수 있는 기름이 없다”며 “북한 해군이 합동 기동훈련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정률 해군참모총장은 “정확한 건 표현할 수 없지만 북한 해군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결론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라며 “전쟁이라는 게 1년이 아니라

2, 3, 4년이 간다”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은 우리의 58분의 1이다. 쓰는 기름양도 우리의 2%도 안 되고 철강 생산도 2%, 전력 생산도 4%다. 이런 나라를 가지고 미군이 없으면 무너질 것처럼 자신 없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가 이미 상당한 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준4군 체제 개편의 실효성을 따졌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느끼지만 90개 중 81개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일부 군정 권한과 1·2사단 작전통제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만으로 준4군 체제가 실현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